



지난 4일 전주시 관동로에서 열린 '제12차 전북도민총궐기'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크게 잘한 일이고 탄핵은 큰 경사가 된다는 의미의 '탄핵대경 구속대길'이라 쓰인 걸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속대길 탄핵대경”... 전북의 촛불 다시 타올랐다

제12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 “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허용” 성토

설 명절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던 전북의 촛불이 2주 만에 다시 타올랐다.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관동로에서 열린 '제12차 전북도민총궐기'에 참석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북시국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700여명의 시민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이전보다 참여인원은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전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 분노하며 무대에 올라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시민은 “청와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섰다. 그렇다면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정농단 사태는 전례가 있었던 일이나. 만도 안 되는 이유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압수수색을 허용하라”고 청와대의 태도를 꼬집었다. 무대 위에서 자유발언을 마친 시민들은 ‘구속대길 탄핵대경’ (拘束大吉 彈劾多慶·구속은 크게 잘한 일이고 탄핵은 경사가 된다)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걸개를 들고 행진을 시작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전주의 변화기인 견고 싶은 거리를 가로지르며 ‘대통령을 탄핵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라’, ‘봄에는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에 호응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함께 외치며 대열에 동참하면서 줄은 차츰 길어졌다. 경찰은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민일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차선을 통제하고 보행자 소통 위주로 교통정리에 힘썼다. 다행히 촛불을 든 시민들은 오후 7시20분경 별다른 사고 없이 목적지인 전주 풍남문광장에 도착했다. 전북시국회의는 촛불을 든 시민들과 풍남문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진 뒤 해산했다. /뉴스

도민과 함께 안전위험요인 발굴·개선

▶ 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3월 31일까지 54일간
재난위험·취급시설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

전북도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 분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국민 모두가 참여해 안전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대규모 예방활동이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3개반으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안전대진단 전반을 컨트롤 한다. 진단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교통운송수단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 분야 및 안전신문고 신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중점 안전진단 사항으로는 시설물 구조체의 안전 여부 등 하드웨어분야부터 재난 대비 매뉴얼의 작성·활용 및 교육훈련 여부, 법규미비, 안전불감 관행 등 소프트웨어분야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진단하게 된다. 특히, 재난위험 및 취급시설과 안전사각지대 그리고 자체점검한 시설물의 15%범위를 표본대상으로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2016년 전국 최우수기관 달성과 더불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2016년 대비 4대 추진전략 강화 및 6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해 실효성을 거두기로 했다. 먼저 민간시설 및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기로 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시장·군수, 민간인이 진단한 시설물 중 재난위험 및 취급시설, 안전사각지대 등을 선택 우

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지진 발생 우려시설은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는 진단과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사고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시군별 '안전점검 민관 합동 기동반'을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확보 진단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예방민간예찰단 등 재난관련 민간단체 및 통·리·반장 등을 활용,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관합동 '이행실태점검반'을 통해 시설의 구조적 안전 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여부, 합리한 법 및 제도 개선사항 및 특수 시책 등 전반에 대해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해 효용성을 거둘 방침이다. 해빙기, 개화기,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등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

에 부처 주관으로 점검한 시설은 그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하고, 계절적 특성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 시기에 별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대적인 홍보강화를 통한 도민참여 붐을 조성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을 통한 도민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드론 등 장비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산업 육성과, 재해예방사업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조기 발굴, 토목·건축 등 안전 전공 대학생 및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등 일자리 창출과 적극 연계 추진기로 했다. 전북도는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법령 등 제도적 미비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스키장 사고 야간에 자주 발생”

낮보다 기온 떨어져 변하는 설질·좁아지는 시야 원인
유성엽 의원 “안전교육 강화 통해 사고 예방토록 해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스키장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야간·심야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 정읍)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2만9,065건으로 연평균 968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 간 전체 스키장 이용객 대비 안전사고 발생률은 13/14시즌 0.19%, 14/15시즌 0.2%, 15/16시즌 0.17%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스키장 사고 가운데 야간·심야(18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년간 발생

한 스키장 사고 가운데 야간·심야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9,953건(한 시즌 당 평균 3317건 발생)으로 15/16시즌에는 약 40%의 사고가 야간·심야 시간에 발생했다. 야간은 낮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설질이 변해 미끄러운 구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판단력이 떨어져 낮 시간대 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늦은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특 압수수색 임의제출 수용 검토'

군민 郡民 중심中心의
참민주의회 民主議會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한 의회

01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02
바로 뛰는
현장위주
의정

03
연구
노력하는
전문의회

04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http://assem.muju.org